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사가 운영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건에서, 회사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

[대상판결 :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5누70654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운영하는 A, B, C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, A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(11%)과 B, C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(20%)을 달리 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.

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B, C사업장은 A사업장과 '하나의 사업장'이므로 B, C사업장에도 산재보험료율 11%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B사업장이 A사업장과 산재보험료 부과단위가 되는 '하나의 사업장'임을 입증하였고,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이광선 변호사



민창욱 변호사